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실형

1심서 징역 2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유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해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해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

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해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 위한모임(경공모) 산재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법적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이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단해서 기관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칭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영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8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 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선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YS 차남 김현철 "文정권은 안하무인·수주대토" 비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현 정권은 한 미디어로 각주 구걸, 수주대토, 안하무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이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견해 차를 이유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보름만에 현 정권을 작

심 비판한 셈이다.

앞서 지난 12일 김 상임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족한 저는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짙은 민주당 생활을 접고자 한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글을 통해 남북정책과 경제정책, 탈원전 문제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견해 차가 있었음

을 시사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로부터 영입제안을 받고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이후 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장을 지낸 뒤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당 중진들, 황교안·오세훈 등 출마 자격 놓고 갑론을박

최고우편할 것 없이 신속하게 추인 절차를 밟아서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는 후보, 높은 지위의 후보, 당원과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받는 후보를 책임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겠는가"라며 "국민 지지를 스스로 깨어 먹는 것"이라고 지적

다"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흥준표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을 두고는 "공직선거법에는 임기 종 직을 그만둔 선거에는 그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돼 있다"라며 "당현·당규에 명문 규정이 없어서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상식에 맞는지는 되돌아 볼만하다"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주 의원은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출마자격에 문제없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 비대위에서 부여하리고 한 게 어제 결론"이라며 "당현·당규에 의하면 당원이면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봤는데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당할 경우 다 피선거권이 주어지면 기회주의자만 나올 것"이라며 "당 밖에 있다가 궂은일은 안 하고 기회이면 나오고 기회가 아니면 안 나오고 그러면 당이 어찌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전당 대회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심재철·주호영 의원은 반대 입장장을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30일 열린 회의에서

격을 부여할 것을 비대위에 주문했다.

다 전당 대회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심재철·주호영 의원은 반대 입장장을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30일 열린 회의에서 "전당 대회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심재철·주호영 의원은 반대 입장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31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심 의원은 최근 책임 당원 자격 논란이 됐던 황교안, 오세훈에

대해 피선거권이 있음을 만장일치

로 확인해줬다고 한다"라며 "김병

준 위원장님께서 이끄는 비대위는

미래로 갈지 판가름 날 텐데 국민

환호가 얼마나 잘 모일지 걱정된

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비대위 결정

만 남았는데 현명한 결정을 해 지

금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해줄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반면 31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심 의원은 최근 책임 당원 자격 논

란과 관련해 "원초적 흥결"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 판가름 날 텐데 국민

환호가 얼마나 잘 모일지 걱정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전당

대회 갈등 요인을 최대한 줄여가는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의 관심에 어긋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책임

당원에 관한 문제는 내일 아침 비대

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